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

하영선 · 전재성 엮음

하영선 · 전재성 · 김병연 · 위성락 · 이희옥 지음

2016년 2월 26일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6 East Asia Institute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ISBN 979-11-86226-79-7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북핵위기의 새로운 해법

하영선 · 전재성 엮음

하영선 · 전재성 · 김병연 · 위성락 · 이희옥 지음

2016년 2월 26일*

1. 머리말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위한 첫 실험을 하고,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광명성 4호를 발사함으로써 한반도는 1991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여섯 번째 북핵위기를 맞이하고 있다(표1 참조). 지난 사반세기 동안 겪은 악순환들에 비춰봤을 때 이번 6차 북핵위기는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핵위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은 6차 핵위기 이후 수소폭탄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에도 악순환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한은 향후 7차 핵위기 시점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기술적 발전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둘째, 이번 핵과 미사일 실험은 집권한지 4년째를 맞이하는 김정은 정권이 오는 5월 35년 만에 개최하는 제7차당대회에서 선보이겠다는 “휘황한 설계도”의 예고편이었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개발중단이 나 핵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김정은 정권이 21세기 ‘강성국가’ 건설 과정에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더라도 경제-핵 병진노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셋째, 과거 다섯 차례의 핵위기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제재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했다. 6차 핵위기를 맞이한 지금 유엔(United Nations: UN)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를 통해 보다 강화된 일곱 번째 제재결의를 앞두고 있고, 한국과 미국, 일본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된 다자 및 독자 제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포함한 이러한 제재 노력은 중국의 제한된 참여 속에서 폐쇄국가인 북한의 새로운 노선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와 직면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2016년 2월 3일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진행된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전략” 토론회 이후 참석자들 간의 심층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쳐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북한의 핵기술 능력 고도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핵무장 노선, 국제사회와 한국의 제재 효과성 문제 등 3중적 어려움 속에서 7차 북핵위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사반세기동안 실패해 온 제재와 협상이라는 단순 해법 대신 효율적 경제제재의 강화,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의 구축, 북한 비핵화의 신외교 모색,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노선 촉진이라는 새로운 복합해법이 필요하다.

[표1] 북핵위기의 역사

	일 지	비 고
1차 핵위기	-1993.3.12 북한 NPT 탈퇴선언 -1993.5.11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825 -1994.10.21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하영선 “북한 핵·미사일의 주기적 위기,” <계간사상> 45 (1) (2000).
2차 핵위기	-2002.10.3-5 미국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 제임스 켈리 방북 -2003.8.27 베이징 1차 6자회담 -2005.9.19 베이징 4차 6자회담 공동성명(핵프로그림 포기, 경제 원조, 외교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수립)	-EAI NSPR 1(2004.6.17) -EAI NSPR 4(2004.10.22) -EAI NSPR 11(2006.1.2)
3차 핵위기	-2006.7.5 북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 -2006.7.15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1695 -2006.10.9 북한 1차 핵실험 -2006.10.14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1718 -2007.2.13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서	-하영선편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EAI, 2006.12) -EAI NSPR 19 (2006.11)
4차 핵위기	-2009.4.5 광명성 2호 장거리 로켓 발사 -2009.5.25 북한 2차 핵실험 -2009.6.12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1874	-EAI 논평 제1호(2009.6)
5차 핵위기	-2012.2.29 북미 2.29 합의 -2012.4.13 광명성3호 1호기 장거리 로켓 발사 -2012.12.12 광명성3호 2호기 장거리 로켓 발사 -2013.1.22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087 -2013.2.12 북한 3차 핵실험 -2013.3.7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2094	-EAI 논평 제28호(2013.2)
6차 핵위기	-2016.1.6 북한 4차 핵실험 -2016.2.7 광명성 4호 장거리로켓 발사 -2016.2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안, 관련당사국 다자 및 독자 제재	-EAI 하영선컬럼(2016.1.7)
7차 핵위기	-?(북한 5차 핵실험)	



2. 효율적 제재의 강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취한 여섯 차례의 제재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와 유통 재원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역과 금융에 대해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고, 금수품목의 이동에 관해서도 검사, 입항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개인, 단체, 그리고 외교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정권 유지와 관련된 사치품의 유입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문제는 이러한 제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이행할 동기와 효율적 이행체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유엔에 대한 사후 보고 역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유엔 결의안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더라도 북한에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엔 차원의 다자적인 효율적 체제가 여전히 불비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재를 넘어선 포괄적인 경제제재가 가능한가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유엔 상임안보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북한 정권 자체의 안정성에 위해를 미친다는 생각 아래 광범위한 경제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러시아는 냉전기부터 비확산체제를 미국과 함께 만들고 현재에도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한 강한 제재에 미온적이거나 찬성해온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이 중요한 특징인 동아시아의 지정학 구도에서 여전히 북한을 지정학적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강력해질 경우, 북한 정권의 붕괴가 초래될 수 있고, 한미의 대북 전략이 북한 붕괴를 유도 또는 방지할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의 동북아 전략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큰 북한의 붕괴를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량살상무기와 사치품에 한정된 대북 경제제재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해왔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를 계기로 독자적 대북제재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미국 상하원의 표결과 대통령의 승인으로 발효된 대북제재법안은 대량살상무기뿐 아니라 인권, 사이버, 사치품 조달과 관련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개인, 집단 차원의 제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어 김정은 정권의 북한 통치자금에 대한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자금이 활용될 수 있는 광물 거래, 특히 흑연, 석탄 등 지하자원의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제재도 포함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의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력을 비롯한 미국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제3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미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기존 유엔 차원의 제재를 넘어선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핵심 당사국인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기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오던 개성공단의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의 종합적인 효과는 대북 경제제재의 핵심 고리인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확장될 경우 이에 대한 미중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중국의 합의 없이 미국이 중국의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을 제재대상으로 삼는다면, 미중관계는 불가피하게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하고, 중국도 북핵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훼손할 각오가 되어있는지가 핵심이다.

최근 이란 핵 문제의 타결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큰 효과를 발휘했던 것처럼,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진화한다면 북한에게도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화과정은 미중이 각각 서로에 대한 관계 악화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한국, 미국, 중국이 북한에 가해지는 대북제재의 수위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다. 현상 유지는 한국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 붕괴는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결책은 제재를 하지 않는 것과 붕괴에 이를 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양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수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제재 국면에서 한국이 기울여야 하는 핵심 노력 중의 하나는 대중 전략이다.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의 도입을 비롯한 대북 군사억지력 확보와 대북 경제제재의 강화 노력에 대한 중국의 의심을 불식시켜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한국의 북핵 억지 노력은 한계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보다 강화된 국제연합의 다자제재에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가능하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도입을 막거나, 이 기회에 북핵 문제가 중국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중국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려고 한다. 북한 경제의 축이 북중 양자 경제관계라고 할 때, 중국의 추가적인 대북 단독 경제제재 없이 북한의 비핵화 단초가 마련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국은 우선 북핵 문제와 한국의 노력이 미중의 전략경쟁과 연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를 미중의 전략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한국의 운신 폭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이 중국에 대한 레이더 탐사 능력 확보라고 의심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향후 대중 군사적 압박카드라고 인식하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 정권의 붕괴 유도 및 미국의 한반도 전체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불안해한다면 중국의 참여는 요원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북핵 전략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에 한정되며,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적 공존과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비한 한미동맹 강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미중 군사 경쟁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대북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동아시아 외교 전략과 비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한 두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이 한국의 전반적인 대북 전략은 물론 동북아 지역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은 한국의 외교전략 전반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양국 정상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 정세 전반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마련하고, 경제 및 사회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주요 외교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전략대화의 통로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 경제제재와 같은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 전략적 이해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웠다. 한국이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면,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자신의 핵심 국가이익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한국 외교



의 목표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과 반드시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조화롭게 공동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 대화를 본격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중국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 대외무역의 90%와 해외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선 역할을 하는 중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북한 체제를 자칫 붕괴시킬 수 있는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한국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북한에게는 한중간 전략적 협력이 상당한 수준의 대북제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인식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려면 한중 양국은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포괄적 전략대화를 추진하면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중 협력 역시 상당 수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압박도 중요하다. 이미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보편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제기해 왔다. 유엔도 2005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다양한 압박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는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산하 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지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동조하는 국가들도 점차 많아졌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표결에서 기권 국가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는 외교적, 정치적 압박으로 북한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노선 선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의 구축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경제제재의 강화와 함께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대신 한국의 독자적 비핵 억지 및 방어체계의 신속한 구축과 함께 한미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대북 미사일 방어체제와 확장억지체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결과, 일차적으로는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며 개발하고 있는 핵 능력이 심리적 우위 효과를 포함한 현실적인 정치군사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수령체제의 생존을 명분으로 하는 북핵이 오히려 체제 불안을 심화시키는 안보 딜레마를 키운다는 점을 북한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2013년 10월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체제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미국과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 협의를 시작하고, 독자적인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6차 핵위기를 계기로 북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군사적 억지와 방어를 위해서 비핵안보체제의 강화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6차 핵위기와 함께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공포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대북 핵 억지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독자 핵 개발에 따라 지불해야 할 비용은 얻게 될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탈냉전과 함께 생



존 전략으로서 독자 핵개발의 길을 선택한 북한은 역설적으로 끊임없는 경제제재와 체제 불안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데탕트의 어려움 속에서 독자 핵개발을 추진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제재와 기술적 제재에 직면해야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독자 핵무기 개발과 한미군사동맹 중 하나만을 생존전략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압력을 끝으로 눈물을 머금고 핵개발의 꿈을 버렸다.

21세기 중견국 한국이 독자 핵개발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공포의 균형을 본격적인 정책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40년 전보다 훨씬 큰 경제, 안보, 외교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세계 5대 원자력 대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국내 에너지 수요의 약 30%를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구나 군사적으로는 독자 핵개발과 한미군사동맹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과 미국의 주한미군, 확장억제 전력, 핵우산은 현실적으로 쉽사리 병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미 외교관계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처럼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만약 독자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단순히 한반도의 핵무장화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핵무장화를 불려와 결국 동아시아의 핵 경쟁 가능성을 크게 높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핵강대국이 주도하는 핵비확산체제(Nonproliferation Treaty: NPT)는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고 한국은 핵강대국들의 강력한 견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자 핵개발의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 핵개발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부정하게 된다.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비핵화선언이 무의미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화의 근거 역시 사라져 북한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핵 규범질서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논의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비효용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냉전시대에는 약 10,0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탈냉전 이후 그 효용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비핵 첨단 무기체제로 대체되어 700개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북한에게 주는 상징적 억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21세기 신군사질서에서 빠른 속도로 폐기하고 있는 전술핵무기를 한국이 뒤늦게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증대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은 비핵안보체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비핵억지방어체제의 검토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정치와 군사의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핵무기는 일차적으로 정치적 무기이고 이차적으로 군사적 무기이다. 또한 억지방어체제도 정치와 군사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능력 개발은 반드시 군사 무기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유사시에는 정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억지방어체제가 군사적으로 불완전하더라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형 비핵억지방어체제는 완성시기가 2020년대로 예정되고 있으나 북한의 빠른 핵위협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과감하게 늘려 완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리고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억지방어 능력을 개발하는 동시에 보완적인 한미 확장억제력으로 유사시 미국의 신뢰도 높은 전략폭격기 및 항공모함 전단의 신속한 한반도 전개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미 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국내외 논쟁들은 두 가지 측면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공격용 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를 포함한 다층적 상공 방어 능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군사와 경제의 효용성에서 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 지도자들의 군사적 결정 과정에 정치적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사드 배치에 대해 예상되는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비핵안보체제 구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부차적으로 사드가 대중국 봉쇄용이 아니라 오로지 대북 방어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중국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공동 배려가 중요하다.

4. 북한 비핵화의 신외교 모색

1990년대 초 이래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와 함께 외교적 협상도 함께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로는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2005년의 9.19 6자회담 공동성명, 2007년 2.13 5자회담 합의, 2013년 2.29 북미합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네 차례의 외교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은 계속되어 왔으며 현재 6차 핵위기와 직면한 상황이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4차 핵실험을 준비하던 중인 2015년 10월 1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성명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방도는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과 전쟁도발을 억제해나가는 랭전의 방법이다. …… 다른 하나의 방도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응해 나오므로써 신뢰에 기초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차 북핵위기 이래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6차 핵위기의 악순환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북미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대북 확장억지 중단, 한미군사동맹 폐기 등을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해 왔고, 평화협정 협상과정에서 핵국가 대 핵국가의 협상을 주장하며 북핵 철폐보다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보여왔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협상과 핵폐기 협상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 양자를 연계하여 평화협정 체결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북핵 협상도 파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상 당사자의 문제도 형식적인 휴전협상 당사자의 명분을 이용하여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핵심 협상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6차 북핵위기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일차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신속히 새로운 결의를 통과시켜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여 북한의 진전된 핵, 미사일 계획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자체는 목적이 아니며 한반도 핵문제는 담판을 통해 해결의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6차 북핵위기의 중국 책임론에 대한 미국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오히려 위기 국면의 향후 전개는 여전히 미국과 북한 쌍방이 어떠한 정치적 결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실험 이후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미국의 대북제재법 제정, 일본의 단독 제재와 함께 위기의 악순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2월 17



일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는 대화 방식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관련 당사국들의 상이한 이해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노력으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구상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기를 요청했다.

유엔 안보리가 경제제재에 합의하고, 한미일이 보다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추진하면 김정은 정권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북한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제재가 성공적으로 강화되면 북한은 ‘조르기’와 ‘버티기’의 악순환에서 잠정적으로 숨을 고르기 위해 중국이 제안하는 협상방식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한미일은 ‘조르기’와 ‘버티기’의 악순환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 ‘조르기’는 계속하되 북한의 ‘버티기’를 풀기 위해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 동결과 비핵화에 대한 신뢰성 있는 비핵 북한의 체제보장, 관계개선 및 경제지원을 포함하는 신구상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역시 이러한 신구상을 볼 때 단순한 비핵화, 평화협상 병행추진론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에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신외교 구상과 실천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국제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북핵 책임론의 불필요한 갈등보다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한미일의 단독 제재 공동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신중하게 대북제재를 활용하여 북한이 비현실적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실용적인 비핵안보-경제발전의 신병진노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고 6자회담에서 다양한 형식을 빌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병행해서 논의해야 하는 장기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 한국은 현재 북한의 북미 평화협정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비현실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신 관련 당사국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신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신구상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90년대 초반 이래 겪어 온 네 차례의 합의 불이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행은 기존 합의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포기, 대북 경제원조, 외교관계의 정상화,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4각 관계를 제대로 연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도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신뢰성 있는 비핵 북한의 체제보장을 어떻게 병행 추진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제재가 유지되고 대북 억지 방어체제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속에 무엇보다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불가역적으로 표명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핵 북한에 대해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평화협정보다 훨씬 신뢰성 있는 복합 한반도 평화변영체제를 마련해서 북한이 비핵안보-경제의 병진노선을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구상은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비핵북한의 복합적 체제보장,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의 실천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신구상의 두 번째 고려 사항은 미국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미국은 과거에 북한과의 종전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체제보장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이유로 핵을 개발하고, 미국과 맺은 여러 차례의 비핵화 합의를 파기하여 미국과의 신뢰구축에 실패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12년 2.29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미사일 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은 중장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미국과 국제사회를 할 선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이 단기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비핵 북한과의 공존을 원한다는 것을 북한에게 명확히 발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중국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서 미중의 전략적 협력을 한국이 추동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국내의 불필요한 의견 차이를 극복할 수 있고, 북한의 주민 및 잠재적 대안세력에게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협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5.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노선 촉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핵문제를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북한 스스로 자생적 비핵화 노선을 추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대 세습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통성의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래 경제-핵 병진노선의 깃발 아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힘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신년사에서 5월 7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휘황한 설계도”의 예고편으로 경제발전을 강조한 다음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1월 16일에 경제발전과 핵실험에 관한 담화에서 “올해 우리의 첫째가는 과업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세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의 수소탄 시험은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정상적인 공정을 거친 것일 뿐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들이 ‘일상화’되었듯이 그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인 병진노선 관철사업도 일상화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와 핵은 상호 보완적이 아니라 상호 모순적이다. 핵, 미사일 능력 개발로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선전과는 달리 핵, 미사일 프로그램은 외부의 대북 경제제재를 심화시키고 있고, 경제회생의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 대외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고, 외화별이로는 개성공단, 광물수출, 노동력 수출 등 3대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화수입은 광물 수출과 노동력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국이나 유엔의 제재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급감할 수 있고 향후 대외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는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경제가 근본적인 개혁개방 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시장화의 덕이 크다. 북한의 시장화는 핵개발로 대외원조가 막히면서 배급경제가 붕괴되고 북한 정권이 비공식적인 시장경제 부문을 인정하는 속에 현재까지 진행되었다. 특히 북한의 시장은 2012년 6·28 새경제관리체계 이후 유사 사유재산권이 형성되고 새로운 경제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북한 정권의 경제 운용에서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가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시장과 정권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경제-핵 병진노선을 힘들여서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서 경제발전-비핵안보의 병진노선을 추진하도록 하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경제발전과 비핵안보의 중요한 두 신호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송신함으로써 북한 스스로 병진노선의 손익계산을 다시 검토하고 제2의 병진노선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19세기형이 아닌 21세기형의 문명대국 건설을 건설에 나서도록 독려해야 한다.

첫째로 북한이 핵위기를 거듭하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 이에 상응해서



체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국제 제재의 빠른 강화로 인해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지게 됨으로써 체제유지 비용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함께 체제 붕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21세기 생존번영전략으로서 현재와 같이 과잉 안보비용을 지불하는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에 적합한 안보비용을 지불하는 비핵안보-경제발전의 신병진노선을 새로운 대안으로 추진하도록 한국 및 국제사회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기여할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인도적 지원과 낮은 단계의 경협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북한 시장의 성장과 근본적 이행경제의 안착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북중 간의 민간 교역이 안정된 형태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중국 동북지방의 기업들은 북한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시장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남북 교역과 투자의 증가도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발전된 경제를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가 계속 진행되어 공식 경제 부문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북한 정권과 시장의 관계도 복잡해질 것이다. 북한은 시장에서 법인세, 소비세 등의 새로운 조세제도를 마련하는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점차 수용할 것이며, 성장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통일은 북한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안보-경제발전의 신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근본적인 내부 변화를 거쳐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의 동반자가 되도록 한국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공동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6. 향후 정책 제언

1.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제재를 강화하되, 한국의 의도 발신, 향후 협상과 관여의 국면을 고려한 전체 로드맵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핵기술 능력 고도화, 김정은 정권의 강력한 핵무장 노선, 국제사회와 한국의 제재 효과성 문제 등 3중적 어려움 속에서 북핵위기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제재와 협상의 단순한 해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신에 효율적 경제 제재의 강화,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의 구축, 북한 비핵화의 신외교 모색,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 노선 촉진이라는 새로운 복합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2. 제재 국면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독려하되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독자적 국가이익의 여지를 인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에 대한 한중 간 전략 협력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외교의 목표가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과 반드시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조화롭게 공동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한중 전략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중국에게 북한의 붕괴를 한국이 유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줌과 동시에, 한중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로드맵을 조율해야 한다.



3.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억지를 추구하되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가져올 수 있는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북한의 증대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은 비핵안보체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독자 핵개발과 미국의 주한 미군, 확장억제와 핵우산은 현실적으로 쉽사리 병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억지방어체제가 가지는 군사적 정치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면 한국은 현재 북한의 북미평화협정을 포함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비현실성을 확실하게 밝히고, 대신 관련 당사국 모두를 주도할 수 있는 신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형 평화구상은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비핵 북한의 복합적 체제보장, 군사적 신뢰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비통제의 실천원칙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미국과 국제사회를 할 선도할 필요가 있다.

5. 북한이 21세기 생존번영전략으로서 현재와 같이 과잉 안보비용을 지불하는 경제-핵 병진노선 대신, 적합한 안보비용을 지불하는 비핵안보-경제발전의 신병진노선을 새로운 대안으로서 추진 하도록 한국 및 국제사회는 공동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장기적으로 비핵화에 기여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면서 북한이 발전된 경제를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관계 개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안보-경제발전의 신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근본적인 내부 변화를 거쳐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통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공동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 ■



집필진 약력

하영선 EAI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다. 저서 및 편저로는 《하영선 국제정치 칼럼 1991-2011》, 《북한세계정치론 : 전략과 원리 그리고 새로운 질서》, 《한일 신시대와 공생복합 네트워크》, 《변환의 세계정치》 등이 있다.

전재성 EAI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외교안보분과 간사)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등이며, 최근 저술로는 《정치는 도덕적인가》, 《동아시아 국제정치 : 역사에서 이론으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등이 있다.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및 서울대 경제학부 BK21 플러스 사업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영국 에섹스대학(University of Essex)과 서강대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체제이행과 응용계량경제학이며 주로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다. 2011-2012년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경제분과 간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자체평가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 주러시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냈다. 2003년 제2차 북핵위기 당시 북미국장으로서 북핵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2009년 3월부터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을 이끌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79년 제13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약 36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중국의 정치변동과 동북아 국제관계이며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중국의 국가 대전략연구》 등의 단독 저서를 낸 바 있다. 미국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교수, 중국해양대학 초빙교수, 일본 나고야 대학 특임교수, 베이징 대학 교환연구원 등을 거쳤다. 현재 수도사범대학, 길림대학, 천진외국어대학, 푸단대학 조선-한국 연구소 등의 겸직교수와 객원교수 등을 겸하고 있으며, 중국 내 유력잡지인 〈東北亞論壇〉, 〈中國戰略報告〉, 〈當代韓國〉의 해외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보고서의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이며 EAI와는 무관합니다. EAI는 웹사이트를 통해 각종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http://www.eai.or.kr/type_k/public_panelList.asp?code=kor_report&category=25
- 이 보고서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
유재승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jryu01@eai.or.kr
- 보고서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 유재승

